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 6. 22.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엄경석 의원

나. 제출일자: 2017. 5. 11.

다. 회부일자: 2017. 5. 26.(의안번호: 1128)

2. 제안이유

성동구 내에 레미콘 공장, 등 미세먼지 원인 사업장이 많이 입지해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명시(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대기측정망 설치 규정(안 제6조)

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규정(안 제7조)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및 저감활동 참여자에게 활동실비 보상

라.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2017. 5. 12. ~ 5.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성동구 내 레미콘 공장 등 미세먼지 원인 사업장이 많이 입지해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 제2조에서는

-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 제5조에서는

-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 대기측정망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 제8조에서는

-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새 정부 출범 직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낡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였고, 지난 5월 27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열리는 등 최근 미세먼지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복합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물질로, 국외적 원인으로는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는 중국발 황사와 중국 동북지역에 산재해 있는 석탄을 연료로 하고 있는 산업시설과 난방 등이 있으며, 국내적 원인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41%, 건설기계 등 17%, 발전소 14% 순이며, 수도권은 경유차가 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환경부 조사결과가 있음.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와 공기의 질은 전 세계 최하위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특히, 우리 구의 경우 삼표레미콘 공장, 성수동 공장지대 등이 입지해 있는 지역 특수 여건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됨.

- 다만, 미세먼지 대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조례안 제7조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중앙 정부 및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시비 및 국비 보조금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장비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도로변 물청소를 자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